

정책세미나

문재인정부 금융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

-출범 2주년을 맞이하여-



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와 과제

2019년 4월 22일

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 병 윤

목차

I. 금융부문의 전반적인 성과

II.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모습

III. 금융정책의 방향과 추진 실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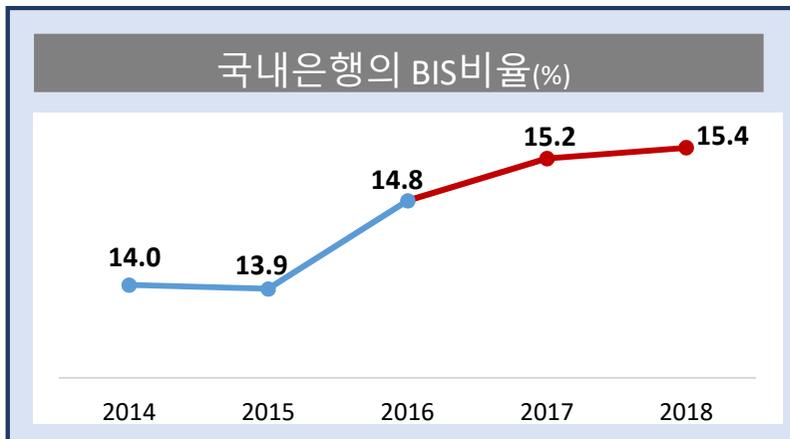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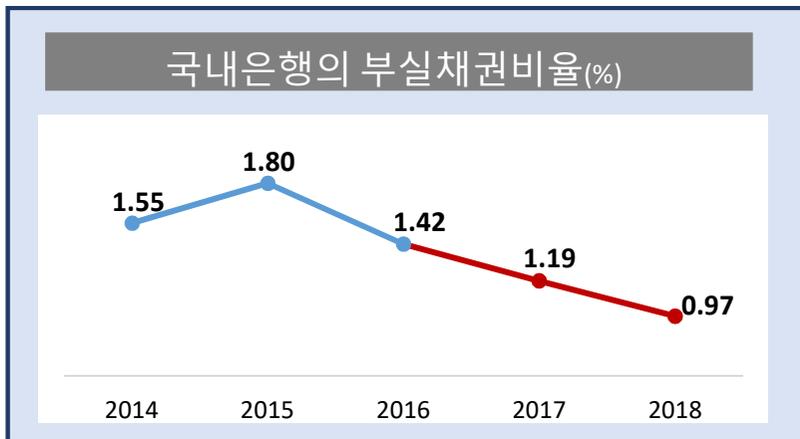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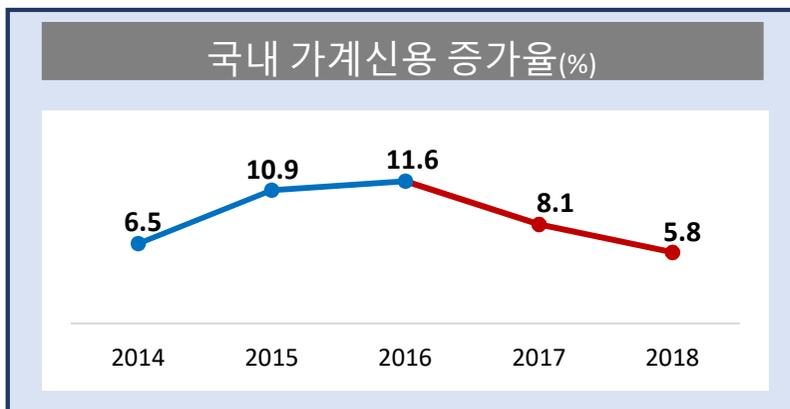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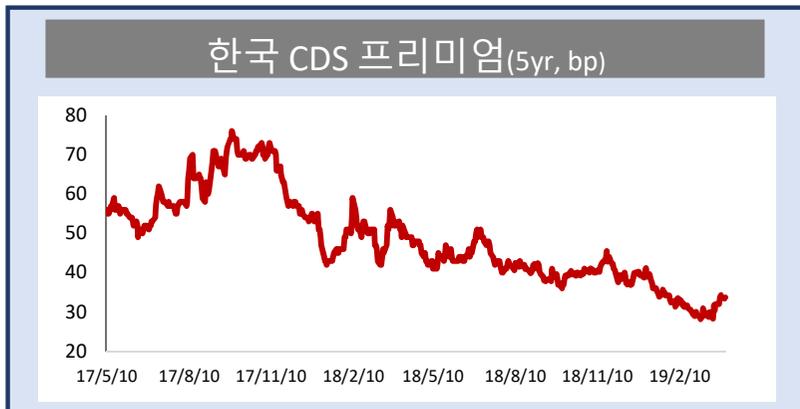
1. 금융부문 채신과 신뢰구축
2. 생산적 금융 강화
3. 포용적 금융 강화
4. 금융산업 경쟁 및 혁신 강화
5.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

IV. 성과 및 향후 과제

I. 금융부문의 전반적인 성과

금융시장 안정성 확대

- ◆ 국가 부도위험 지표인 CDS 프리미엄 하락
- ◆ 국내 금융시스템 안정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인 가계부채 증가율 감소
- ◆ 국내 금융산업에서 가장 비중이 큰 은행의 부실채권비율 하락, 자본적정성 상승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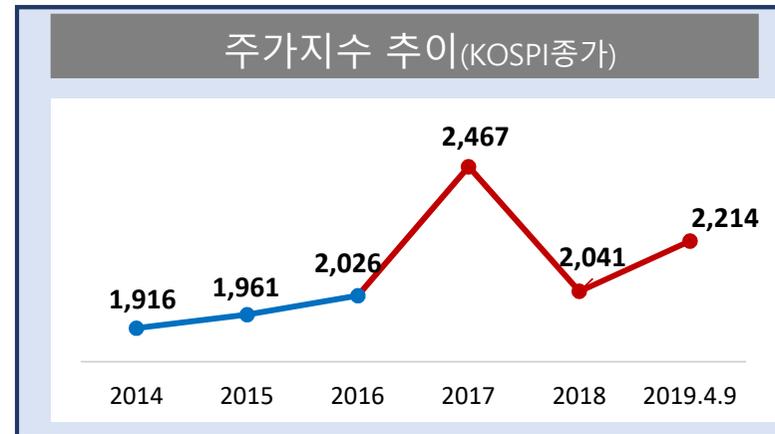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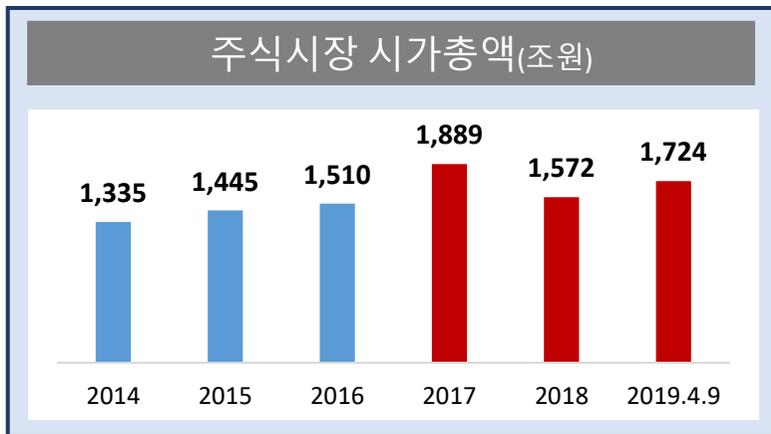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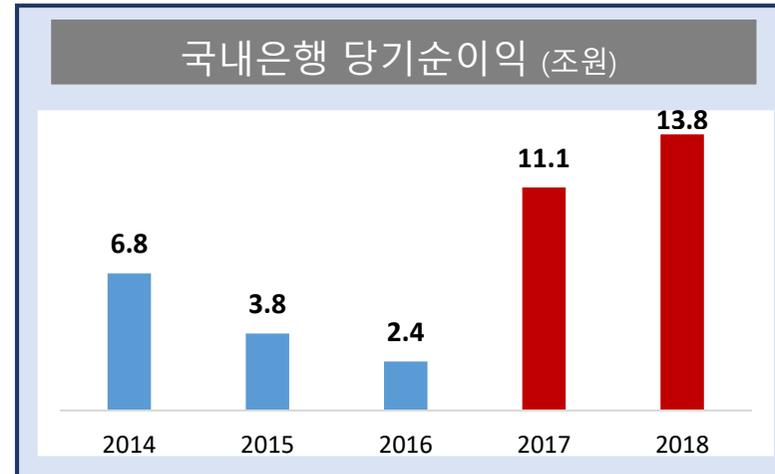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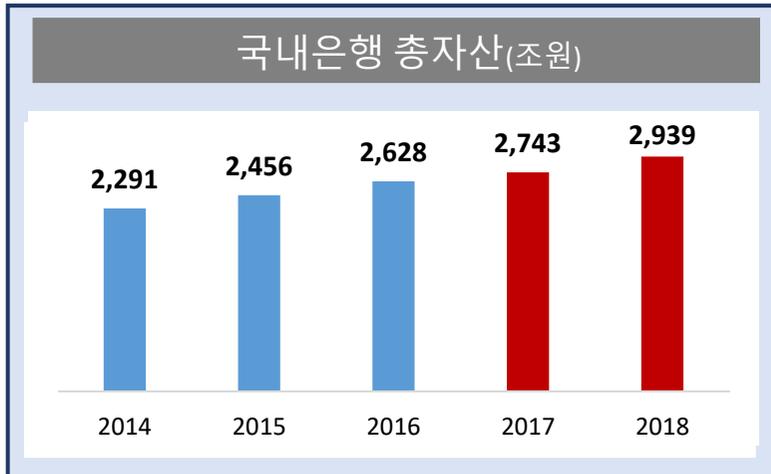
자료: 국제금융센터(CDS프리미엄)

주: 가계신용 = 가계대출 + 판매신용
자료: 한국은행

주: 2018년 말 국내은행 자료는 잠정치 기준
자료: 금융감독원

은행산업과 자본시장의 발전

- ◆ 국내은행 총자산은 지속적인 상승세, 수익성도 크게 개선
- ◆ 주식시장 시가총액과 주가지수도 2016년 말 대비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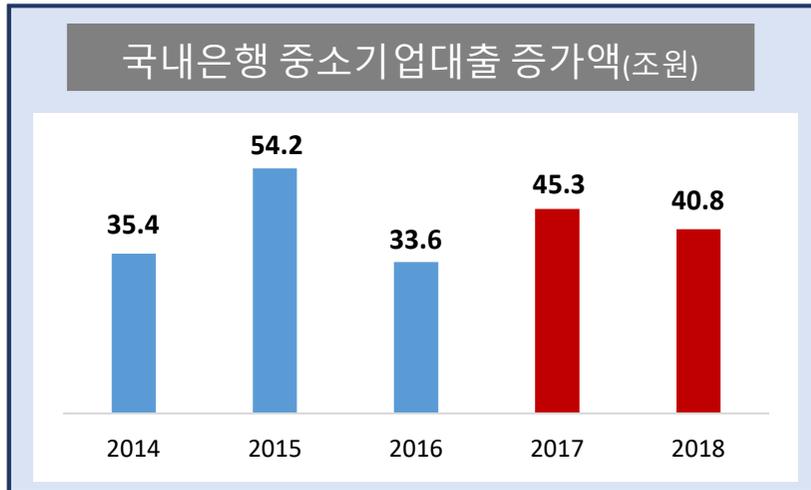


자료: 금융감독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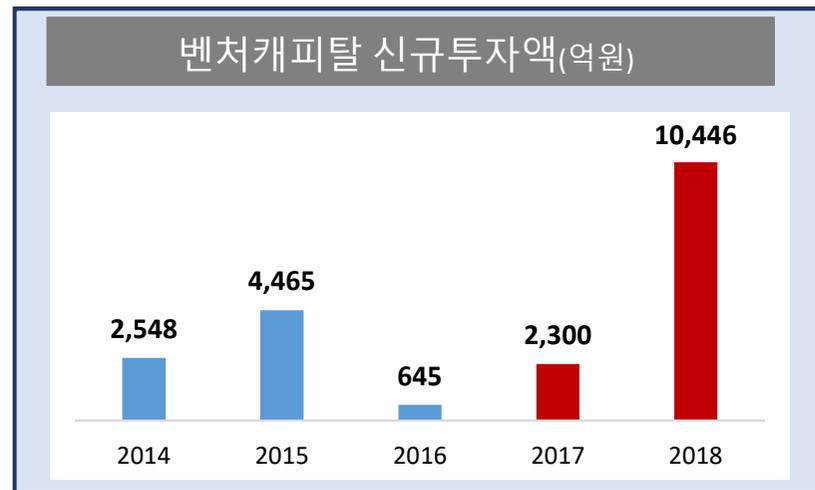
자료: 한국거래소

중소·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

- ◆ 국내은행 중소기업대출 증가액이 2016년 대비 상승
- ◆ 벤처캐피탈 신규투자액이 2018년에 크게 상승



자료: 금융감독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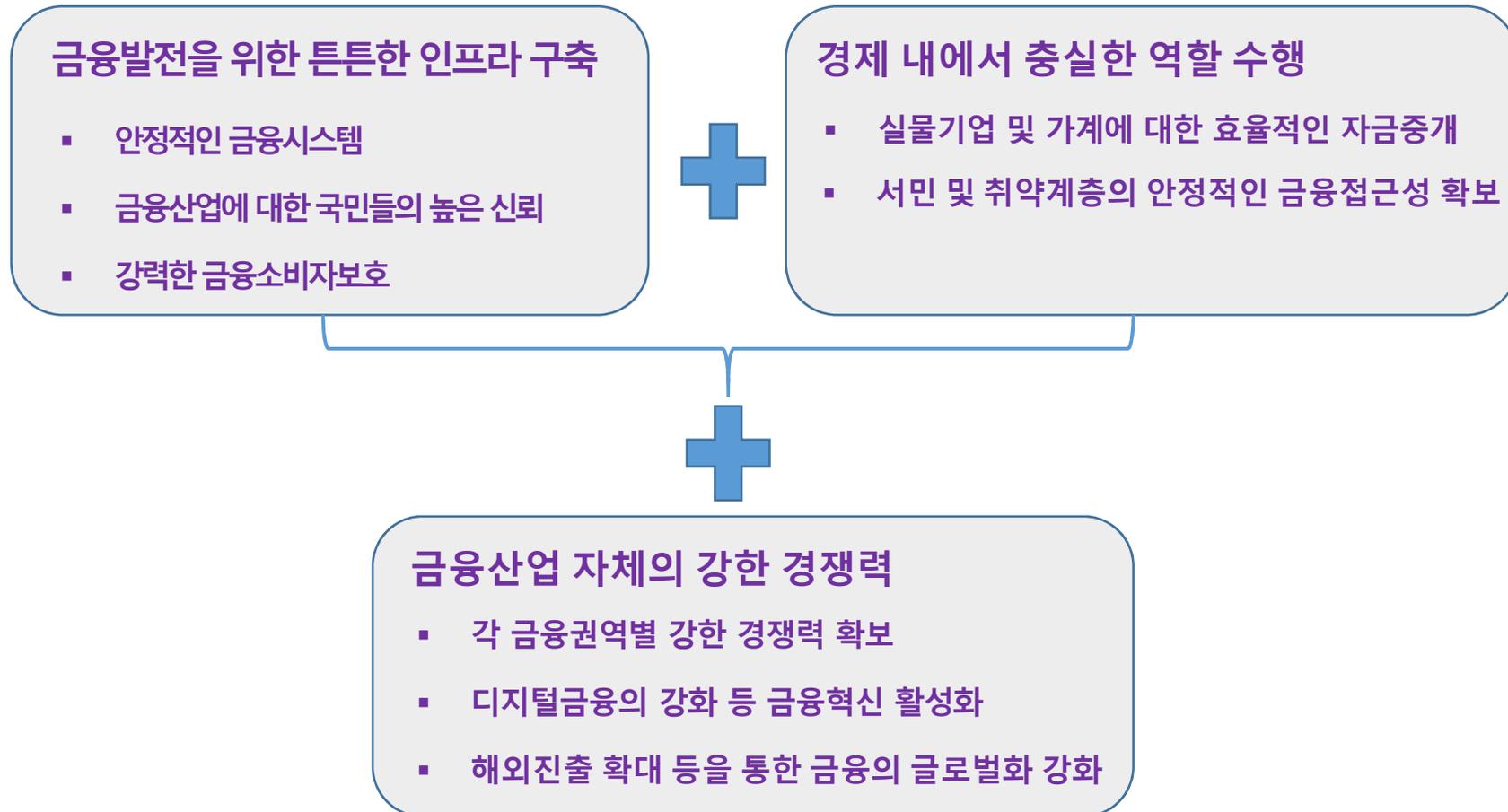


자료 : 벤처캐피탈협회

Ⅱ.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모습

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모습

◆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모습



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모습(계속)

- ◆ **안정성** (금융시스템 안정성, 높은 신뢰)과 **공정성** (금융소비자보호)을 기반으로 **효율성** (생산적 금융을 통한 효율적 자금중개, 자체 경쟁력 강화)과 **사회적 책임** (포용적 금융)을 동시에 달성하는 금융산업
 - ◆ **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은 이의 달성을 위해 각종 금융정책을 추진**
 - 금융정책 4대 추진 전략
 - 금융부문 채신 및 신뢰구축
 - 생산적 금융 강화
 - 포용적 금융 강화
 - 금융산업 경쟁 및 혁신 강화
- ⇒ 금융안정의 기반위에 4대 전략 달성 목표

Ⅲ. 금융정책의 방향과 추진 실적

1. 금융부문 쇄신과 신뢰구축
2. 생산적 금융 강화
3. 포용적 금융 강화
4. 금융산업 경쟁 및 혁신 강화
5.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

1. 금융부문 쇄신과 신뢰구축

◆ 금융은 신뢰에 기반을 둔 비즈니스

금융에 대한 신뢰 강화 → 금융 활성화 → 경제 전반 활기

◆ 주요 정책 추진 내용

✓ “회계개혁·선진화 3법” 공포

- 엄정한 시장규율 확립을 위한 감사인의 주기적 지정제와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도입, 과징금 신설 등

✓ “금융회사 지배구조법” 개정 추진

-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
- 사외이사의 독립성·전문성 개선, CEO 선출절차 투명성 제고 등

✓ “금융그룹감독법” 제정 추진

- 금융그룹 위험의 효과적 관리

✓ “금융소비자보호법” 제정 추진

- 판매행위 원칙을 쉐금융상품으로 확대
- 불완전 판매 예방
- 소비자 권익보호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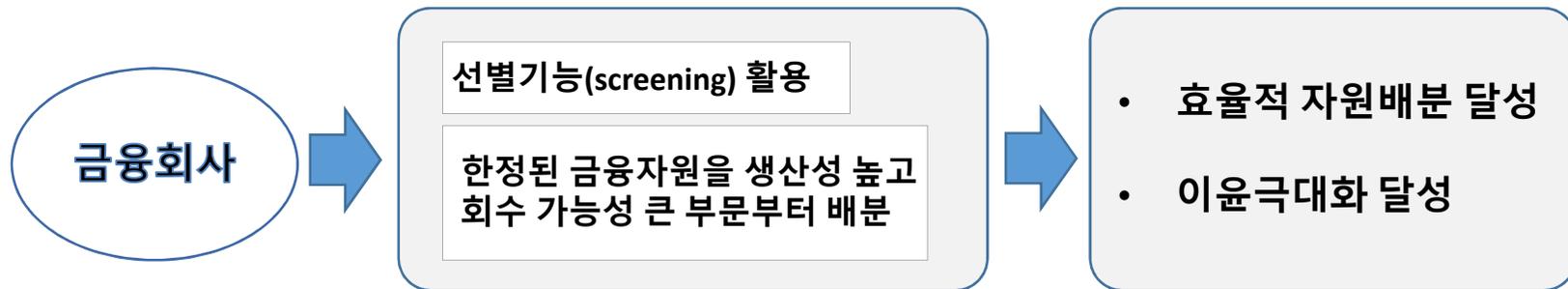
✓ 일상생활 속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

- 보험상품 사업비·모집수수료 체계 및 약관 개선
-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·투명성 제고
- 채권추심 시 채무자 권익 보호 강화 등

✓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, 불법사금융·금융사기 엄중 대응 등 부당행위 철폐 및 시장규율 강화

2. 생산적 금융 강화

◆ 시장경제시스템에서 금융회사의 금융자원 배분 역할



◆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문제점

- 선별기능 보다 담보위주 대출 행태
- 기업대출 보다 가계대출 위주 자금 운용
- 혁신형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자금 지원 불충분

➡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증개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추진

2. 생산적 금융 강화(계속)

◆ 주요 금융정책 추진 내용

✓ “금융권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” 마련

- 자금이 가계·부동산 보다 기업으로 흘러가도록 유도
-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자본규제 부담 상향조정
- 은행 예대율 산정 시 가계/기업대출 간 가중치 차등화 등

✓ “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” 마련

- 자본시장 혁신으로 벤처·혁신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 지원 등

✓ “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”추진

- 대규모 모험자본 공급기반 확충, 증권시장 기능 강화, 자본시장 세제 정비 등을 통해 혁신기업 성장을 적극 뒷받침 등

✓ “기업여신심사시스템 전면 혁신”추진

- 일괄담보제도 도입 추진
 - 부동산 외에 다양한 동산 자산의 일괄 담보로 대출 유도
- 혁신기업의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을 토대로 대출 유도
- 혁신 중소·중견기업에 향후 3년간 100조원의 자금 공급 추진 등

✓ 주력산업의 자금애로 해소

- 자동차·조선산업 등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
 - 중소 조선·자동차부품 업체 등에 총 4.6조원 유동성 공급 추진
 - 중소·중견기업 시설투자 등에 3년간 총 15조원 지원 추진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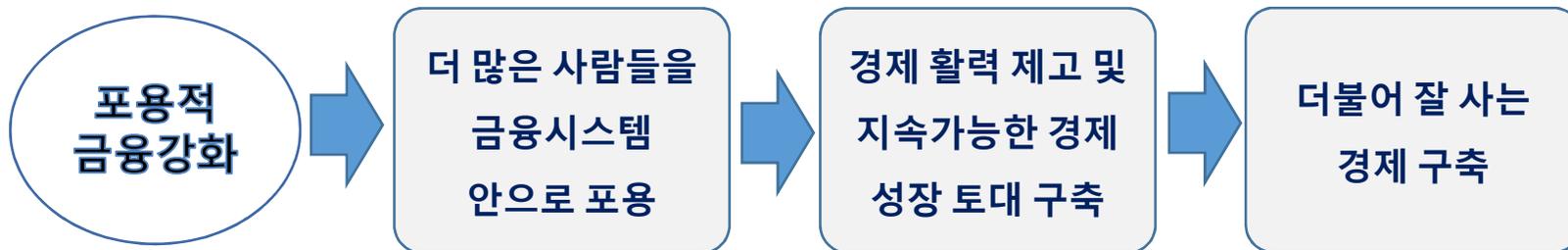
✓ 중소기업 대출·투자 활성화 추진

- 혁신·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체계 개편
-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
 - 유망 스타트업 등에 5년간 총 190조원 지원 추진 등

3. 포용적 금융 강화

◆ 포용적 금융 강화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토대 마련

- 금융이용 기회가 제한되는 저소득·저신용 취약계층 및 제도권 금융시스템에서 탈락한 계층의 금융접근성 향상



3. 포용적 금융 강화(계속)

◆ 주요 정책 추진 내용

✓ 취약 채무자 보호 강화

- 2017년 이후 소멸시효 완성채권 약 34.8조원 소각
- '취약차주의 연체부담 완화방안' 마련 등

✓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

- 정책서민금융 공급여력 증대 및 중금리 대출 공급 확대
- 법상 최고금리 24%로 인하
- 소매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경감 등

✓ 수요자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포용적 금융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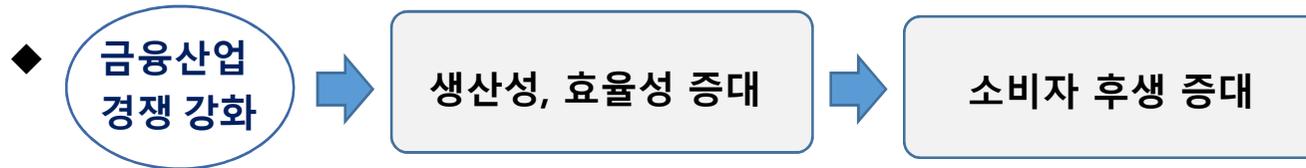
- 중·저신용자 : 정책금융상품 신설
- 자영업자 : 경영애로 해소 등을 위한 금융지원
- 고령층 : 주택연금 제도 개선
- 청년 : 청년층 「전·월세 금융지원 프로그램」 마련 등

✓ 사회적금융 생태계 구축

-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
- 표준 사회적경제 기업 평가체계 및 사회적 금융 관련 DB 구축 추진 등

4. 금융산업 경쟁 및 혁신 강화

① 금융산업 경쟁 강화



◆ 주요 정책 추진 내용

✓ “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” 마련

- “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” 구성
- 은행, 보험, 금투 전업권에 걸쳐 진입장벽 완화 추진
- 인가절차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으로 진입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

✓ 신규 금융회사의 시장 진입

- 카카오뱅크 (2017. 7)
- 2019년 상반기 중 최대 6개 금융회사 신규진입 허용 예정
 - 보험회사 1개, 부동산신탁회사 3개, 인터넷전문은행 최대 2개

✓ 금융산업·시장의 자율성과 역동성 제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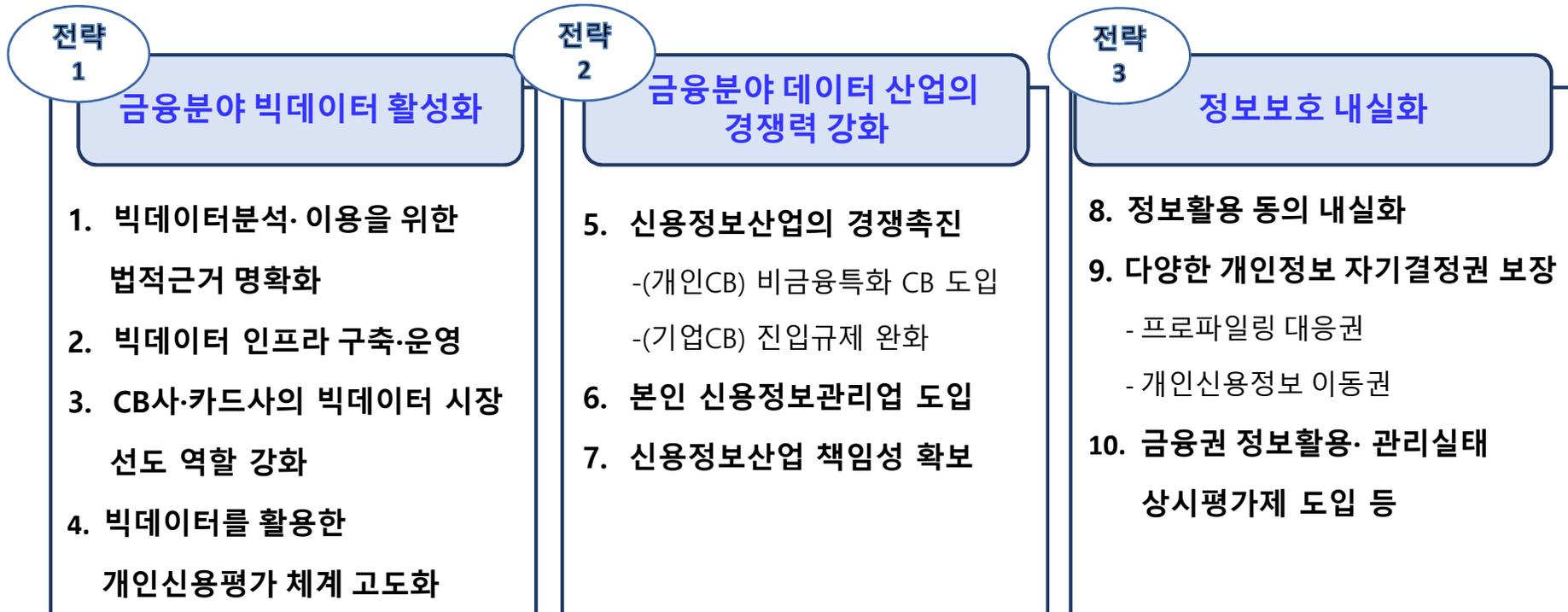
- 불필요한 상품·영업규제의 과감한 개선 등 영업 자율성 확대
-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방안 추진
- 자산운용산업 현장불편규제 개선 등

4. 금융산업 경쟁 및 혁신 강화(계속)

② 금융혁신 강화

1) 디지털 금융 강화

- ◆ 핀테크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 등으로 금융부문에서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적극 대응
 - ◆ 주요 정책 추진 내용
- ✓ “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” 마련



4. 금융산업 경쟁 및 혁신 강화(계속)

✓ “금융규제 샌드박스” 추진

-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(4.1일)되고 시행령, 고시 등 하위법규 입법절차도 마무리되어 샌드박스 법체계 완성

✓ 핀테크 및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“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” 마련

- 금융결제 인프라 전반의 개편 → 혁신적인 결제서비스 출현과 활성화 지원 → 금융결제 부문의 혁신 및 경쟁 촉진

전략 1

◆ **금융결제 시스템의 혁신적 개방으로 다양한 결제 서비스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**

- 공동 결제시스템 (오픈뱅킹) 구축
- 오픈뱅킹 법제도화
- 핀테크기업에 금융결제망 개방

전략 2

◆ **전자금융업의 기능별 규율 전환 및 기능 확대 등 금융결제업 체계 전면 개편을 통해 혁신적 결제서비스 창출 촉진**

- 업종별 → 기능별 규율 체계 전환
- 새로운 전자금융업 도입
-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허용

전략 3

◆ **낮은 규제 정비, 세제 인센티브 등 규제·세제의 시장 친화적 개선을 통해 새로운 결제 서비스 활성화 여건 마련**

- 낮은 규제 개선
- 범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 지원
- 세제 인센티브 방안 검토 추진

4. 금융산업 경쟁 및 혁신 강화(계속)

2) 금융분야 신남방 정책 강화 등 금융회사 해외진출 관련 정책 추진

◆ 신남방정책

- 한국과 아세안의 공동번영을 위한 사람, 평화, 상생번영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대외정책
- 아세안은 경제통합과 함께 금융통합도 추진하고 있음.
- 국내 금융회사들은 해외진출 전략의 일환으로 동 지역에 2017년말 해외점포 157개 운영 중

◆ 관련 주요 정책 추진

- **은행 해외진출 관련 규제 완화**
 - 은행의 해외진출 시 사전 신고 의무 완화
 - 은행이 금융투자업무 시 재산상 이익 제공 규제 합리화 등
- **인도네시아,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들과 금융협력 강화**
 - 한.인니 상호교류 확대 및 핀테크 분야 협력 강화 등
 - 한.베트남 핀테크 MOU 체결 등

5.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

◆ 금융시스템 안정성은 금융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임.

-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.

◆ 주요 정책 추진 내용

가계부채 관리 강화

- ◆ 신DTI 및 DSR 도입
- ◆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자본규제 부담 상향조정
- ◆ 은행 예대율 산정 시 가계/기업 대출 간 가중치 차등화
- ◆ 9.13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다주택자 등에 대한 대출 규제 등
- ◆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관리 및 취약차주 안전망 마련 등

금융시장 안정 대책

- ◆ P-CBO, 회사채 인수지원, 채권시장 안정펀드
- ◆ 금융안정을 위한 상시점검. 대응체계 구축 등
 - 금융시장 상시 모니터링 등 비상대응체계 강화
 -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
 - 부동산 그림자금융 모니터링

상시적·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추진

- ◆ 산업은행을 통한 STX조선, 한국GM, 금호타이어, 대우조선 등의 구조조정에서 성과
- ◆ 신용위험평가 기준 개선 및 주채무계열 제도 보완 등 추진
- ◆ 부실채권(NPL) 시장 정비, 기업 구조혁신 펀드 확대운용 등을 통해 자본시장 주도의 구조조정 활성화 여건 조성 등

IV. 성과 및 향후 과제

- 1. 금융정책의 주요 성과**
- 2. 향후 과제**

1. 금융정책의 주요 성과

금융정책의 주요 성과

✓ 가계부채 리스크 축소 등 금융시장 안정성 확대

- 국가 부도위험지표인 CDS 프리미엄 하락
: 56.0 bp (17.5.10) → 33.7bp (19.4.2)
-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기반 구축
 - 가계신용 증가율 하락 : 11.6%(16년말)→5.8% (18년말)
 - 다주택자 추가 대출 억제 등 부동산 투기수요 근절
 - DSR 도입으로 상환능력 초과 대출 억제

✓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를 통한 경쟁과 혁신 촉진

- 카카오뱅크 등 신규 금융회사 진입
- 금융업에 경쟁과 혁신을 가져올 “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방안” 발표
- “규제 샌드박스” 제도 도입으로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 증진
- 모바일 간편결제 활성화 및 클라우드 펀딩을 통한 창업·벤처기업 자금 공급 확대
 - 클라우드펀딩 조달금액(억원):
(‘16년)174→(‘17년)280 →(‘18년)301

✓ 생산적 금융 확대

- 국내은행 중소기업대출 증가액 상승
: 33.6조원 (‘16) → 45.3조원 (‘17) → 40.8조원 (‘18)
- 벤처캐피탈 신규투자액 상승
: 645억원 (‘16) → 1조 446억원 (‘18)

✓ 포용적 금융 확대

- 법정 최고금리 인하(27.9→24%)로 최대 1.1조원(293만명) 이자부담 경감
- 장기연체자에 대한 적극적 재기 지원
 - 2017년 이후 34.8조원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완료
- 중금리대출 상품 공급 대폭 확대
 - (‘16.7월 ~ ‘17.6월) 2.8조원 → (‘17.7월 ~ ‘18.6월) 3.4조원
-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설치 확대(39→46개소) 등 원스톱 종합상담시스템 구축을 통해 서민금융 수요자의 편의 확대 등

2. 향후 과제

1) 금융업의 자체 경쟁력 강화 필요

- ◆ 국내은행 ROA, ROE는 글로벌 은행들과 비교해 낮은 수준임.
- ◆ 은행업의 주당순이익(PE) 및 주가순자산비율(PBR: Price to Book-Value Ratio)은 여타 국내 제조업 대비 낮은 수준으로 시장에서의 평가가 다른 업종에 비해 낮음.

글로벌 은행 수익률 현황 (단위: %)

	남미	북미	아시아	오세아니아	유럽	한국
ROA	1.37	0.86	0.81	0.84	0.52	0.60
ROE	18.32	9.57	10.48	12.67	7.53	7.90

주 : 1) 세계 100대 은행 평균기준(2017년 말)
 2) 국내 일반은행 기준(2018년 말 잠정치)
 자료 : BankFocus, 금융감독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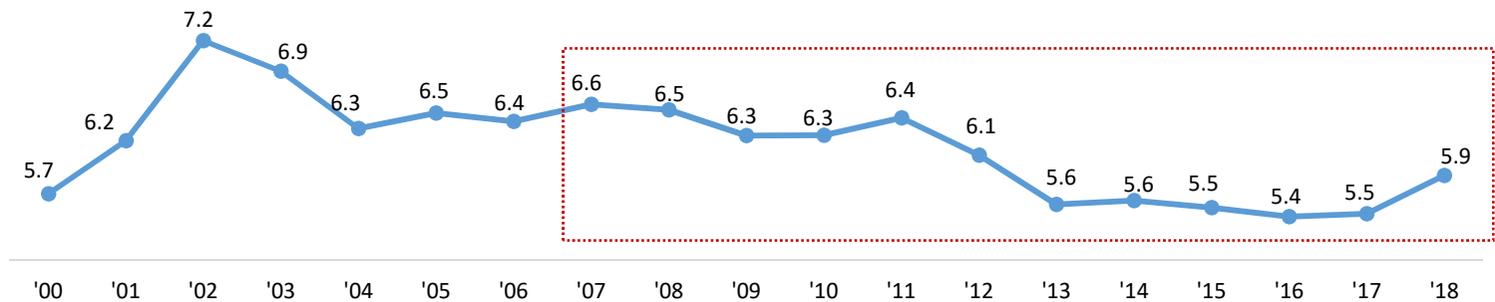
국내 업종별 PER PBR 현황 (단위: 배)

	은행업	통신업	음식료품	제조업	KOSPI200
PER	6.11	10.40	16.94	8.40	8.79
PBR	0.46	1.08	1.27	1.01	0.94

주 : 2018년 말 기준
 자료 : FNGuide

- ◆ 전체산업에서 금융산업이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이 과거에 비해 낮은 상황

우리나라 금융업 부가가치 비중 추이 (단위: %)



자료 : 한국은행

1) 금융업의 자체 경쟁력 강화 필요(계속)

◆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낮은 수익성, 시장평가, 부가가치 비중 등에 대처하기 위해 금융업 자체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

- 개별 금융업의 자체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필요
- 소비자보호를 전제로 금융회사 수익성 확대와 시장평가 증진을 위한 정책 마련 필요

◆ 금융권역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업계와 정부당국 공동 노력으로 마련 필요

금융지주회사

- 종합금융그룹의 위상 확보,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역할 배분, 비은행 역할 강화 및 겸업화 기반 확충, 해외진출 확대 등을 통해 선진 금융그룹들과의 경쟁력 갭 해소 방안 마련

은행

- 글로벌 은행·특화은행·지역은행 등 성장전략의 다변화, 수익원 다변화를 통한 안정적 수익 확보, 심사역량 확충을 통한 자금중개기능 개선 등

금융투자업

- 경쟁촉진·투자자보호를 기반으로 발전방안 마련
- 특히 고령화시대에 자산운용업의 효율화 및 글로벌화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국민재산형성에 기여

보험업

- 사회적 신뢰 기반 위에 내실경영·리스크관리를 통해 위험관리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경제발전 및 사회안정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전방안 마련

* 국회에 계류중인 금융관련 법률들의 조속한 입법 추진 필요

2) 디지털전환 (digital transformation)에 대한 대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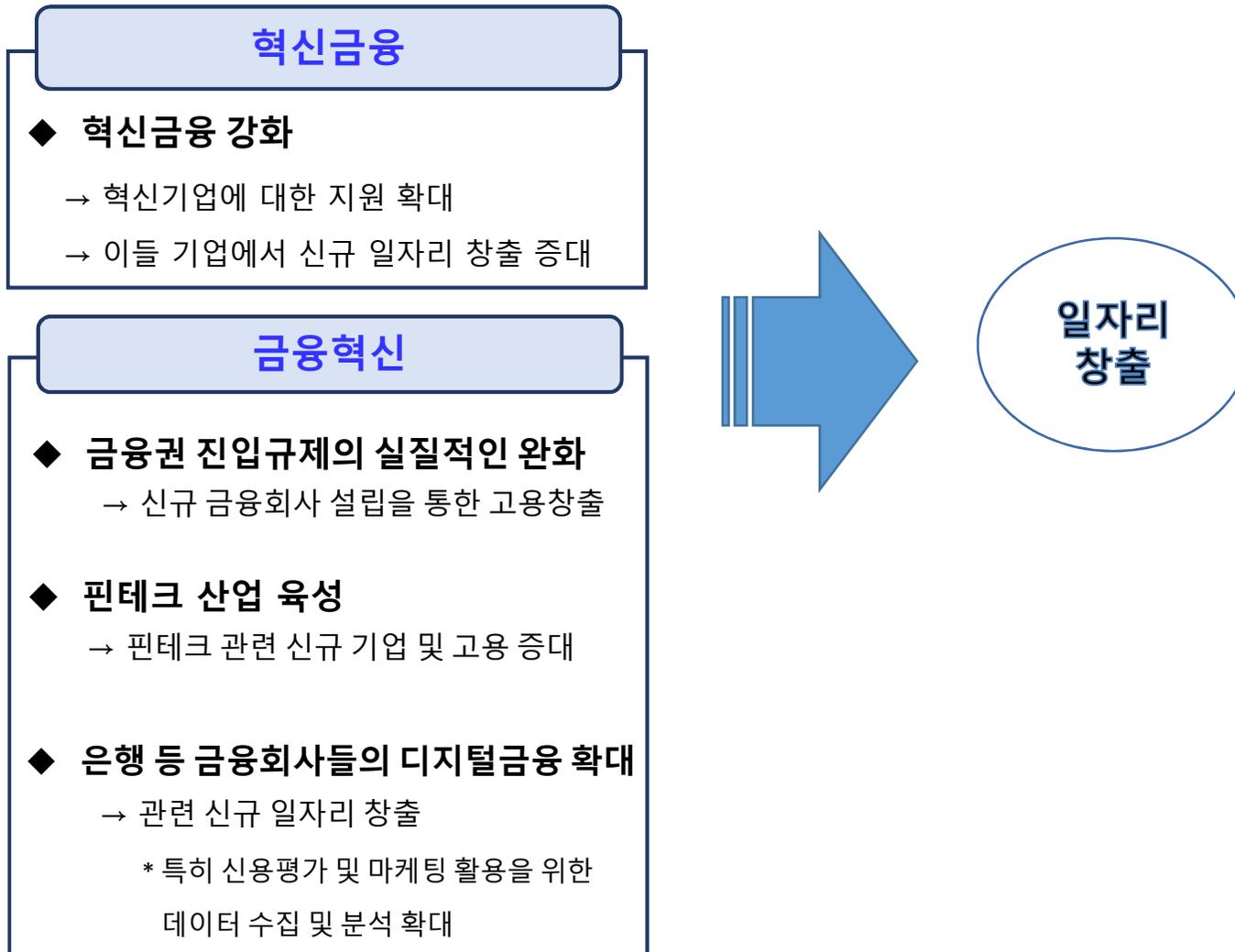
플랫폼 경제로의 전환에 대비

- ◆ 향후 중장기적으로 금융회사 업무는 금융플랫폼 상에서의 기능별 조합 방식으로 전환 가능
 - 금융플랫폼 장악이 중요
- ◆ 금융관련 업무단위 세분화 전망
- ◆ 기능별 감독 및 규제체계 마련

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에 대비

- ◆ 향후 금융업의 경쟁력은 데이터 확보 능력과 이의 분석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중요
- ◆ 금융 뿐 아니라 유통·통신·SNS 등 비금융 데이터와의 결합이 관건
 - 관련 법·규제 정비 필요
 - “신용정보법”개정안 조속 입법 필요
- ◆ 금융회사의 비즈니스 마인드 변화 필요
 - 데이터의 확보와 분석이 실제로 부가가치를 창출
 - 데이터 분석결과가 영업현장에서 실제로 활용

3) 혁신금융 및 금융혁신과 연계한 고용창출 효과 극대화



4)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 도모

◆ 새로운 수익원 확보 및 수익원 다변화 등을 위해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 확대 필요

- 국내 4대 은행 순이익 중 해외부문 비중은 14%대 (2015~17년 평균)에 불과
 - * 글로벌 은행의 경우 많게는 50%
 - * 호주 ANZ나 싱가포르 DBS도 약 25~35% 정도

◆ 금융회사와 금융당국의 노력 필요

금융회사

- ◆ 중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체계적 전략 수립
- ◆ 핵심영업국의 선택과 집중
- ◆ 디지털 역량 강화 및 해외영업 활용
- ◆ 전문 인력 양성 등 추진
- ◆ 각 지역에 은행·증권·보험 등 자회사를 가진 지역금융센터(regional financial center)검토 가능

금융당국

- ◆ 관련 국가의 금융정책 협력 확대 등 금융외교 강화
- ◆ 중장기적 비전 하에 관련 규제·감독 개선
 - 저신용국 진출 관련 규제 개선
 - 여타 국가 대비 상대적 불이익 없도록 조치 등

5) 금융소비자보호 강화

◆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노력 필요

- 금융위의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('19.1월)
 -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금융당국이 노력하지 않는다(43.9%)
 - 금융회사는 상품판매 후 고객에게 신경쓰지 않는다(73.9%) 등

◆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의 지속 추진

- “금융소비자보호법” 제정
- 일상생활 속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등

◆ 향후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 방안 마련 필요

- 금융 디지털화에 따라 소비자 리스크 증대
 - * 소비자에 대한 사기 증대 가능성
 - * 데이터 보안 취약성 및 유출 가능성 등
- 적절한 수준의 금융소비자보호가 유지되는 가운데 금융혁신 도모 필요

◆ 금융회사들은 장기적인 고객베이스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활용하는 방안 모색

- 금융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혁신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도 강화하고 고객베이스도 확대
 - *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상품 컨설팅 강화 전략 등

6) 지속적인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

- ◆ **현재 금융시스템 안정성은 잘 유지되고 있는 상황임.**
 - 2018년 말 가계신용 증가율 및 국내은행 부실채권비율 하향세
 -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도 2017년 초 이후 하향세

- ◆ **금융시스템 안정성 위협 요인 상존**
 - 경기 하향세
 - GDP 성장률 : 2.7% (2018년) → 2.6% (2019년 KIF 전망)
 - 중국 경기 부진, 미·중·EU 무역갈등 등 세계경제 불확실성
 - 가계부채는 안정세이나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불안해질 가능성
 - * 국내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이 최근 다소 상승세
 - 2019년 2월 0.33%로 전년 말 대비 0.07%p, 전년동월말 대비 0.05%p 상승
 - 국내 주요 산업의 경쟁력 약화에 따른 리스크 확대 가능성

- ◆ **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점검 필요**